



중국 남미향 컨테이너화물도 양산항으로 이전 2단계 양산 컨테이너터미널 4개선석 준공대비



현재 상하이 항을 기중점으로 하는 아시아-남미 컨테이너 화물운송 서비스가 10월8일부터 양산 심수 컨테이너 터미널로 이전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지구촌 해양수산' 최신호에 따르면, 양산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하이항국제항무집단(SIPG)은 지난 8월 외교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아시아-남미지역 운항선사에 대해 서비스이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2단계 양산 컨테이너터미널의 4개선석(처리능력 200만 TEU)의 완공을 앞두고 외교에서 처리되던 화물을 이곳으로 몰아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단계 터미널을 개장할 당

시에도 상하이-유럽항로 서비스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산 터미널로 이전한 바 있다.

SIPG는 앞으로 상하이 항만에서 처리하는 로컬 화물량을 줄이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컨테이너 환적중심항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SIPG는 양산 컨테이너 터미널에 사무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서비스를 이전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까지 상하이항에서 처리되던 서비스가 양산 터미널로 이전됨에 따라 인근에 있는 닝보(寧波) 항만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닝보 항만당국에 따르면, 외고교 주변의 화주들이 닝보항을 이용하게 되면, 양산 터미널 보다 운송시간이 30~40분 정도 단축되고, 트럭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어 닝보항을 많이 선호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산 터미널에 기항했던 선사들이 대부분 닝보항에 기항하기 때문에 화물운송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닝보 항만당국은 상하이-남미항로 취항선박의 이전으로 닝보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2단계 양산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상하이-북미 서비스의 이전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선사와 물류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시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머스크 라인이 북미 지역으로 취항하던 선박의 기항지를 양산 터미널로 옮김에 따라 북미 서비스 양산 터미널 이전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SIPG는 이와 관련, 지난 2월 선사 관계자 회의에서 올해 11월에 상하이-북미 서비스를 양산 터미널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선석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행에 들어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양산 터미널을 건설하는 이유가 초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한 원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서비스 이전은 시간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SIPG가 상하이 항만을 국제환적항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다시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의 환적 허브 항만의 물동량 확보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의 양산 터미널이 기대 이상의 처리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부산항의 경우 물동량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최근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올들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부산항에서 처리된 환적컨테이너화물은 모두 346만 5,311TEU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48만 9,850TEU에 비해 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대통령 테러대비 항만보안법에 서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13일 테러 공격으로부터 미국내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항만보안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테러위험 물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6% 선에 그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 검색을 거의 모든 컨테이너로 확대하고 내년말까지 22개 미국 항구에 방사능 탐지기술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세관원들이 화물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 위험 물질을 검색할 수 있는 첨단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미국 전역의 361개 항구에서 근무하는 항만 노동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의 항만보안개선법(PSI법)과 하원의 SAFE법(모든 항만에 대해 보안과 책임을 요구하는 법)과 유사조항 통합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된 법으로, 미국 의회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4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은 지난 2003년부터 세계 주요 컨테이너터미널에 세관원을 파견, 미국행 컨테이너 검색을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컨테이너보안조치(CSI)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박에 대한 보안검색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선박운항과 화물통관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